

■ 서평 ■

폴 콜리어, 『엑소더스』,
김선영 옮김, 21세기북스, 2014.

강 준 영

국가 간 이주 문제는 상이한 세 집단에 걸쳐 있다. 다시 말해 국가 간 이주는 이주자, 유출국의 남겨진 사람들, 유입국의 원주민이라는 세 집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 간 이주 문제에 관한 연구 및 정책은 이주가 이 세 집단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주의 다양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폴 콜리어에 따르면 이주라는 특정한 사태에는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공존한다는 점”(p. 37, 38)을 받아들이고, 이주라는 동일한 사태에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특정 사태에 관한 연구는 그 사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저자는 집필의 목적, 논의의 순서, 방법론을 제시하는 1부에서 우리는 “이주자들 자신과 유출국에 남겨진 사람들, 유입국의 원주민들 [...] 각 집단이 어떤 일을 겪는지 설명해줄 이론과 근거가 필요하”(p. 34)며, 이 이론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주에 관한 연구서에서 연구자가 자신이 이주에 관해 다루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집필 목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주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이주가 이 세 집단에

야기할 상이한 경험과 그 여파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참고로 이 책은 2013년 10월 영국에서 출간되었으며, 한국어 번역본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국가 간 이주의 긴 역사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연구의 부족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아프리카 경제연구센터 소장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천착해온 세계적인 빈곤국 전문가인 저자는 국가 간 이주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빈곤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주가 상이한 집단에 미치게 될 영향을 조망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주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자는 도덕 심리학자 조너선 헤이트의 2012년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의 단초를 찾는다. 저자에 따르면, 조너선 헤이트는 특정 사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사람들이 고수하고 있는 가치가 추론을 규정한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우리는 흔히 추론이 판단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추론을 끌어다 자신의 도덕적 취향에 따라 내린 판단을 정당화하는데 쓴다. 저자는 윤리관이 우리가 수용하려는 추론과 근거를 결정하는 이러한 “미숙한 편견”(p. 22)이 이민 문제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이민 문제만큼 한쪽 주장에 온갖 배타적 주장과 근거를 늘어놓는 경우는 없다. 이민 문제를 논의하는 각각의 진영은 자신의 도덕적 취향과 선형적 편견에 맞는 주장과 사실만을 수용하려 들며, 이로 인해 이주에 관한 논의의 구도는 양극화되었다. 저자는 이주는 분석의 대상이기에 앞서 정치적 논란거리였으며,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의 이민에 관한 연구들도 대개는 탁월한 근거에서 도출 되었다기 보다는 편협하거나 전문적이고 확고한 자신의 견해에 들어맞는 내용만을 정리한 게 대부분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왜 선형적인 도덕적 취향에 입각하여 이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저자에 따르면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근거의 적합성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반면, 가치관을 둘러싼 의견의 충돌은 해결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보기에 공리주의적 보편주의와 자유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국가 간 자유로운 이주를 전적으로 허용하고 모든 불법 이주민들에게 모든 합법적 지위를 단번에 부여하기를 원하는 이주 옹호자들의 견해나 외국인 혐오주의 혹은 인종주의에 근거 하여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적대적인 광적 집단”(p. 39)의 견해 모두 선협적인 도덕적 취향에서 도출된 극단적인 견해의 전형일 뿐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도덕적 관념으로 선호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주의자들의 견해는 이주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이한 집단에 미칠 상반된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현실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이주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연구들에서는 윤리적 틀이 이주 문제를 매우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데, 이주로 인해 야기되는 상반된 효과들을 ‘논란이 많다’거나 ‘부차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국가 간 이주가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오늘날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들은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주 문제의 핵심 쟁점은 ‘이주가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이주율은 무엇인가?’와 같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이민 문제에 대한 자신의 선입관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이주에 따른 각 집단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근거를 적절히 활용해 차분히 사고”(p. 23)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만 이주 정책에 관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해지며, 관련 집단의 상반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합당한 이주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합당한 이주정책을 모색하고 ‘근거를 활용한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방법론적 도구로서 경제학에 주목한다. 저자는 근거에 따른 분석은 경제학의 가장 큰 강점이며 경제적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특정 사태의 원인 및 결과에 관한 더욱 전문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분석 도구란 ‘그래프 모형’과 ‘한계적 분석(marginal analysis)’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이러한 칭송을 저자가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예컨대 경제학이라는 무대의 주연 배우인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특정한 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그래프 모형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말미암아 저자가 지적했듯 우리의 이해를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구로서만 그 의미를 한정해야 한다. 책 곳곳에 걸쳐 등장하는, 일견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래프를 사태를 설명하는 확실한 지표로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 우리가 이민에 관한 논의에 일정한 진보를 제시하기 위해 취해야 할 경제적 분석 도구는 한계적 분석이다. 경제학에서 한계적 분석이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사결정들이 ‘전부 아니면 무(all or nothing)’와 같은 흑백논리에 따라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재의 계획과 행동을 상황에 맞춰 조금씩 바꾸어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모색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저자에 따르면, 한계적 분석 방법은 확고하고 선형적인 자신들의 도덕적 취향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현실세계의 문제들을 도외시하는 극단적인 견해들을 포괄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론이다. 이는 선형적 도덕관념에 근거하여 주장을 개선하는 근본주의자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극단적으로 갈린 양 진영의 논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사이 불법 이주민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한계적 측면에서 개선시킬 수는 있다.

저자는 이처럼 이민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이민이라는 동일한 사태에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상이한 집단이 존재하고, 이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 상이한 집단의 입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자는 이러한 검토가 선형적 도덕적 취향에 근거한 흑백논리가 아니라 회색지대에 무수히 존재하는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들을 고려하는 한계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자신이 설정한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1~4부에 걸쳐 이주 규모와 속도가 이주민, 유출국의 남은 사람들, 유입국의 원주민들 세 집단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조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여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시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이 각각의 여파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포괄적 정책을

제시한다.

1부에서 저자는 이주민의 입장에서 이주의 원인과 이주의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주는 본질적으로 역기능적 사회모델(social model)을 갖춘 나라에서 탈출하는 행위”(p. 51)이다. 여기서 사회모델이란 “한 나라의 제도, 규율, 규범, 조직의 조합”(p. 49)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 나라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본다면, 이주는 순기능적 사회모델을 갖춘 국가로 탈출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처럼 이주의 본질적 성격과 동기를 규정한 후 이주의 규모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1) 유출국과 유입국의 소득 격차의 정도 2) 이주를 가로막는 법적, 사회적 요인 3) 유입국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이주에 따르는 초기 투자비용과 입국을 가로막는 무수한 법적 제약을 경감시켜주는 “이주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무이한 요소”(pp. 219, 220)로서 유입국에 존재하는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주율은 증가하고 동시에 동화율도 감소하여 유입국 원주민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주의 규모를 결정하는 디아스포라의 규모 문제는 유입국 원주민에 관해 다루는 2부에서 다시 거론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 저자는 이주가 유입국 원주민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살펴본다. 저자는 이주가 유입국의 원주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순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유입국의 이주 정책은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심각한 것은 이주의 사회적 여파다. 저자는 미국의 사회과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한 공동체에 상이한 문화를 존속시키는 이주자가 많아질수록 이주자와 원주민 간의, 그리고 심지어 원주민 간의 상호 배려가 약화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상호 배려란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에서 생겨나는 행동 양식으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동료애와 연대감을 느끼게”(p. 85)하며, 이러한

동료애와 연대감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같은 공동체 내의 경제적으로 운이 없는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소득을 이전케 할 동기를 만들어주고 공공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평등을 위한 동력”(p. 312)으로 작용한다. 저자는 문화적 격차가 큰 이주민의 이주가 가속화 될수록 유입국 원주민들 간의 문화적 거리가 증가하며, 이는 유입국 집단 간의 긴장감을 증대시키고 공공재의 재분배를 악화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에서 이주율이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거론한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몇 십년 사이 캘리포니아의 공공서비스가 붕괴했는데, 이는 낮은 소득 구간에 몰려 있는 이주민들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 캘리포니아 고소득 집단이 세금 파업을 하면서 재산세에 상한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정 사회의 상호 배려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문화적 격차가 중요한 요소라면, 유입국 내부의 이주민 집단으로서 유입국과는 상이한 문화적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규모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저자는 유출국 이주민과 유입국 원주민 간의 문화적 격차가 커질수록 이주민의 동화율이 감소하여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이주율을 높여 집단 간 신뢰도를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집단 간 신뢰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주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동화가 요구되며,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공통의 언어 사용, 차별 철폐, 이주민 고유 관습의 선별적 금지 등을 제안한다. 저자는 “박애를 깨뜨리는 자유를 인권으로 여기면 곤란”(p. 148)하며, 다양성의 확대로 인한 편익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상호배려의 약화로 인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각 사회는 이 상충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이주 정책은 “더욱 다양해질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인식”(p. 104)하여 이주의 가속화를 예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이주의 파급효과에 관한 현재의 연구 부족에도 불구하고 “문화개방식 이주 정책에 지나치게 열광하는 사회과학자”(p. 187)의 주장과는 그 성격을 달리할 것이다.

한편 저자는 3부에서 이주로 인해 혜택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여기서는 특히 유입국의 순기능적 사회모델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짜 점심”(p. 200)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유입국 원주민들의 불관용으로 심리적 대가를 치르기도 하는 이주자의 양가적 상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4부에서는 이주가 유출국의 남은 원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첫째, 이주를 통해 유입국의 순기능적 사회모델을 내면화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주자들은 유출국의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멕시코는 이주자의 역할로 고국의 정치참여도가 높아졌던 하나의 사례이다. 둘째, 이주는 이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따라서 유출국의 원주민들은 실패할 가능성을 감수하고라도 유입국에 진출하기 위해 교육에 투자한다. 이는 이주로 인한 유출국의 인재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 셋째, 이주민들의 송금은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준다. 그러나 저자는 이주민들이 이주를 가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주를 통한 피드백 메커니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주를 통해서만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없고, 이들이 귀국하여 고국에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어야만 전 세계의 극심한 빈곤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유출국 사회는 성공한 이민자가 고국으로 돌아올 유인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빈곤을 야기했던 ‘유권자에 대한 책임, 소수자나 개인의 권리 존중, 법의 지배, 독단적 권력에 대한 균형과 견제’와 같은 민주적 제도를 결여했던 역기능적 사회모델을 순기능적 사회모델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저자의 말대로 저소득 사회는 텅 비어 버리고 말 것이며, 이는 세계 문화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순기능적 사회모델의 확립은 성공한 이주자가 고국으로 돌아와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출국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1~4부에 걸쳐 이주가 상이한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저자는 마지막 5부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주의 경제적, 사회적 효과와 그 여파를 종합하여 세 집단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양 진영의 합리적 우려에 걸맞은 효율적이고 간결한”(p. 353) 포괄적 정책을 제안한다. 그런데 저자는 포괄적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고

물질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공공재를 공급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 공동체의 한 단위로서 현대적 의미의 국민 국가를 강조한다. 저자는 “정서적으로 볼 때 국가와의 자기 동일시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p. 315)이며 “국가는 세계적 시민의식을 방해하는 이기적 단위가 아니라 사실상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p. 314)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유럽 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를 초월한 정체성 공유는 극도로 어려운 일이며, 그러므로 이민에 관한 논의는 공동의 정체성을 공유하여 사회적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단위로서 국가를 기본적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주 정책은 유출국, 유입국 각각을 실제적 단위로 놓고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1) 다양성의 확대에 의한 상호 배려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주자 상한선 설정 및 이주자 선별 2) 유출국으로의 귀국을 장려하기 위해 망명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 배려 3) 다양성을 억제하고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동화정책의 지속적 시행 등을 제안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은 자국으로의 ‘불법’ 이주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유입국의 ‘적대적인 광적 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간 자유로운 이주를 전적으로 옹호하는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접근 방법론이다. 합리성을 결여한 채 철저한 인종주의에 입각하여 이민 반대를 외치는 집단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국가 간 이주를 옹호하는 ‘진보적인’ 연구에서도 이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유입국의 원주민들과 유출국의 남은 사람들이 겪는 상이한 경험으로부터 이민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저자가 책의 전반에 걸쳐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연구들에서는 ‘불법’ 이주민의 전면적 합법화와 국가 간 이주의 전면적 자유화가 유입국 지역 공동체에 야기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 간 상호 배려의 약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감소, 신뢰 수준의 하락과 같은 역기능적인 사회적 효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지적은 이민 문제에 관한 진보적인 연구들이 정치적 프로파간다 이상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저자가 제시한 포괄적 정책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포괄적 접근방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몇 가지 한계점들도 있다. 첫째, 저자는 국제적인 대량 이주는 극단적인 세계 불평등에 대한 반응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그 불평등의 원인을 각국 고유의 사회모델의 차이로만 환원시킨다. 이에 따르면 이주의 책임은 전적으로 역기능적 사회모델을 보유한 유출국에 있다. 그러나 유출국의 빈곤은 단순히 유출국의 사회모델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의 빈곤은 근본적으로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는 고소득 국가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로의 재편이 낳은 산물이라는 것, 따라서 유입국은 이주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또 다른 사실을 저자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언급하지 않은 국가 간 이주를 낳은 구조적 원인들에 관해 알고 싶은 독자들은 아비바 촘스키의 『Undocumented』를 참조하면 적절할 것이다.¹⁾

둘째, 저자는 ‘이주민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유입국 원주민들에게 과연 이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유입국의 원주민들에게는 ‘법적으로 이주를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대답한다. 그러나 이는 법 자체가 특정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 구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하는 몰역사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아비바 촘스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이란 특정 국면의 인간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안한 사회적 구축물²⁾이며, 따라서 그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법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에는 수많은

1) 20여년 동안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강단에서 강의하고 글을 써왔으며 이민 관련 단체를 조직해왔던 역사학자 아비바 촘스키는 지난 몇 십년간 신자유주의적 긴축 조치와 시장 만능주의를 조장했던 미국의 정책들이 라틴 아메리카 내부의 생계 농업, 고용, 사회 안전망을 잠식해왔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아비바 촘스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의 자원을 통제하거나 재분배하려는 라틴 아메리카 정부를 반대하거나 심지어 전복하는 등 외부의 강력한 세력으로서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Aviva Chomsky, Undocumented (Beacon, 2014), 186-187.

2) *Ibid.*, 23-24.

폴 콜리어, 『엑소더스』, 김선영 옮김, 21세기북스, 2014.

허클베리 핀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법이 부여했던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도 적지 않은 백인들과 여타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짐이 처해 있는 조건들과 투쟁했던 것이다.³⁾

성균관대학교, shindorim@gmail.com

3) Jonn S. W. Park, *Illegal Migrations and the Huckleberry Finn Problem*, (Temple University, 2013), 17.